

정부는 공무직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1. 관련 기사

□ 2.19.(목) 국민일보, ‘공무직위원회’ 출범 전부터 정책 추진동력 의구심

-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‘공무직위원회’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
-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돌입 직전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. 위원회 설치에 이견이 없지만 그 규모나 파견자 직급 등은 추후 위원회의 업무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했다. 행안부는 법률에는 위원회의 운영 근거만 두고 기획단 구성 관련 근거도 대통령령 위임 대신 훈령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.
- 이번 일을 두고 진보 정부에서 반복된 노동행정 인력 증원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- 공공부문 공무직근로자 고용·임금 등 근로조건, 인사관리, 노사협력 지원 등 위해 「공무직위원회법」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 -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, 실무위원회, 기획단 등을 구성하고,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
- 법령 제·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·개정 목적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, 이를 두고 특정 부처가 제동을 걸었다거나 견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
 - 기획단 규모, 부서장 직급 등은 일반적인 직제 개정과 같이 업무의 성격, 업무량 등을 검토한 후 행안부·기획처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것임

○ 기획단의 구성 근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정안*에도 명시되어 있음

* 제10조(기획단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.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제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위원회 원활한 논의 지원,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, 적정 임금 체계 구축, 부처 협의 등 위한 적정 조직·인력 수요를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	책임자	과 장	김동욱 (044-202-7661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은 (044-202-7981)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2-7047)
		담당자	서기관	곽수연 (044-202-7056)

